

통권제3호

여름
99

통일

김교진단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리영희

논단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과 그 한계 | 서동만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윤미향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신안보정책 | 이원덕

칼럼

한반도 생전구조체계론과 폐리보고
| 이어진, 노장희, 정해구

특별기획

김일성이라는 인물: 셀리그 해리슨에게서
| 셀리그 해리슨 · 리영희

| 연재 |

박정희 · 전두환정권의 통일정책 | 심지연
남한과 다른 북한의 일상용어 2 | 정광
단군 이해 — 신화와 역사의 사례 | 김영학

| 통일에세이 |

청밀선생과 4·19, 그리고 통일운동 | 성대경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윤미향

민족립 정책실 조사부장

1. 머리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둘러
로 갈라 대립하게 했던 냉전의 시대가 해제되고 모든 국가들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이 약속되는 새 국제질서를 고색하고 있다.
또 정보화·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를 하나
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에는 여전히 남은 냉전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시기 남북의 정권은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확신과 '초전박
살의 대상이지 결코 태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하에 상대방을 무력
화시키는 일에 전념해 왔으며 상대방을 몰락시키고, 흡수·해체시키는 일에
엄청난 국가비용을 쏟아부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관계는 대화, 대화 결렬, 긴장 고
조, 대화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이 대화들이 광범한 남북한간의 교류나 접촉

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그 동안 크게 나아진 게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남북한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남북간의 변화를 모색하
고 긍극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준비를 할 시점에 이르렀
다.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신과 반목,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상호신뢰를 바
탕으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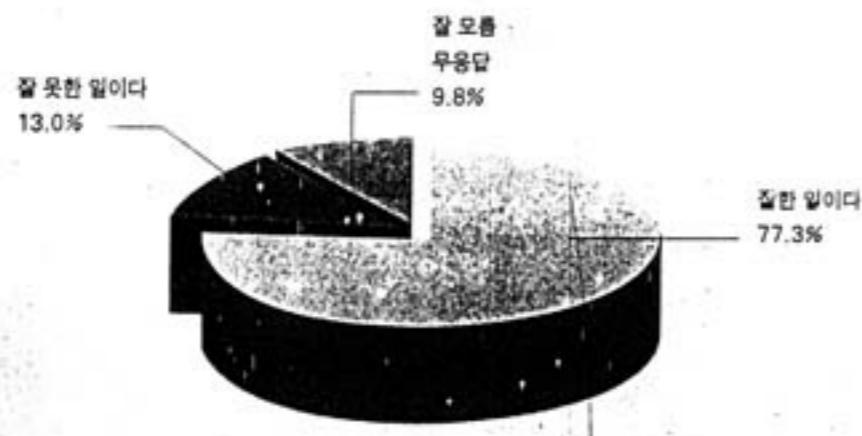
문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냉전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정당하고 적절하게 추진하려면, 대결 당사자 중에 어느
쪽이든 먼저 냉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갈 평화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냉전적 교착 상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는 남
한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탈냉
전적 발상을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하므로써 그 동안 막혀 있던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의 길을 트고, 한반도에 긴장이 아닌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
아 나가야 할 것이다.

2.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한 각계 반응

1.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남북관계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한국 인권상황의 한 실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석방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그림1〉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한 평가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법무부에서 장기수 석방을 발표하기 전인 2월 초에, '3월부터 석달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과 양심수 전원 석방 등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장기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복역하고서도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40년 7개월을 복역했던 우용각씨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1절 특사로 17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을 준법서약서와 상관없이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3-5일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잘했다'는 평가는 77.3%(아주 잘한일이다: 38.3% + 다소 잘한 일이다: 39.0%)인 반면, 잘못했다는 평가는 13.0%(아주 잘못한 일이다: 2.7% + 다소 잘못한 일이다: 10.3%)에 불과했다(그림1 참조).¹

장기수 석방에 대한 평가를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잘했다는 평가는 성별로는 남자(82.1%)가 여자(72.6%)보다, 연령별로는 2,30대(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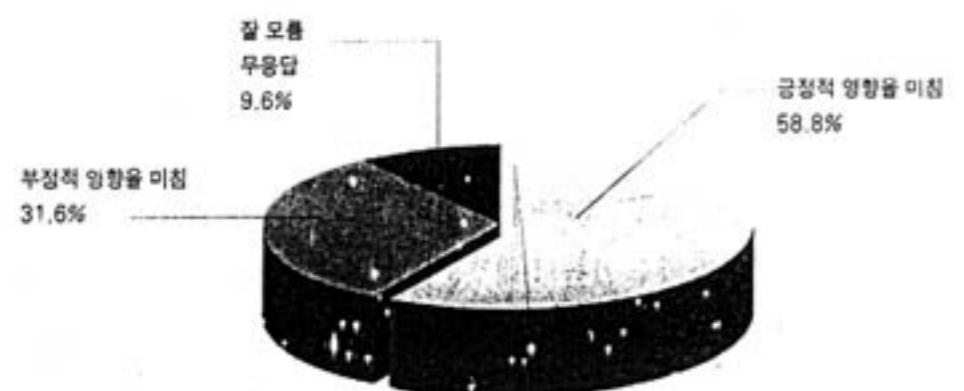
83.8%, 30대: 83.9%, 40대: 71.5%, 50대이상: 68.1%),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이하 68.4%, 고졸 75.6%, 전문대졸 78.9%, 대졸이상 84.9%), 직업별로는 학생(91.8%), 사무/전문직(83.1%), 공무원(83.1%) 등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출소 뒤' 부터가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소한 장기수 가족의 대부분은 북쪽에 있는데다 남한에 피붙이가 있더라도 직계 자손이 아니어서 마음 편히 머물러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그들 장기수 가운데 일부는 사회적응에 성공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대부분 70살을 넘긴 고령들인데다 기나긴 수형생활로 제대로 된 취업기반을 갖추지 못해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곱게 보지 않는 남한사회 자체가 또 다른 감옥일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정식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주민등록을 하려 해도 원래 남쪽에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는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면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에 맞는 국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³

석방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전환점·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이동복 의원은 월간『말』 99년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17인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이북 출신들은 모두 다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전향 장기수들이란 빨치산이나 간첩활동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사상을 포기하라는 설득을 받았지만 그걸 거부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상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라는 것



(그림2)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

이다. 또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⁴

우리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이 58.8%(아주 긍정적 영향: 11.1% + 대체로 긍정적 영향: 47.7%)로, 반 이상의 국민이 장기수 송환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그림 2 참조).

장기수 송환의 영향을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긍정적 영향(아주 긍정적 + 대체로 긍정적)을 미칠 것이란 예상은, 성별로는 남자(62.3%)가 여자(55.5%)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20대: 68.5%, 30대: 62.7%, 40대: 58.4%, 50대이상: 45.3%), 학력별로는 천문대, 대졸이상(전문대졸: 70.2%, 대졸이상: 65.1%), 직업별로는 학생(68.5%), 서비스업(67.3%), 공무원(66.5%), 사무/전문직(65.6%), 지역별로는 호남(67.2%), 충청(64.4%) 지역에서 많았다.⁵

그런데 남북한 양쪽이 번갈아가며 당국간 대화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비전향 장기수 석방을 발표한 뒤 하룻만인 지난 2월 23일, 북한은 “남쪽이 비전향 장기수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낸다면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풀고 폭넓은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국간 회담 재개의 ‘새로운 접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석방하기 전인 지난 2월 24일,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에 대해 “앞으로 남북간에 서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장기수 송환 문제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문제는 과연 남북한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계기로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될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겠는가로 도아진다.

2.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보는 북한의 입장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보는 북한의 시각은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이 남쪽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23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연 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 북한은 이 편지에서 “지난 1월 30일 귀측 법무부는 오는 3·1절 특별사면시에 비전향 장기수들에 한해서는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도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41년째 감옥살이를 해 온 우용각을 포함하여 29년 이상된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모두내놓을 것이라고 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북)는 이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는 귀측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무죄 석방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면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풀고 폭넓은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적십자사가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로인들을 하루 빨리 송환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제 석방하려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차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려 보내리라는 기

미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는 이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본인들과 그 가족들, 내외 여론의 요구대로 그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데 있다"며 "만일 비전향 장기수들을 남조선에서 계속 억류해 놓고 그들의 신상에 불상사가 생기게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당국과 인도주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귀적십자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 정부의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교환입장에 대해서는 3월 21일자 「로동신문」과 5월 10일자 평양방송을 통해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하고, "공화국 북민부에는 국군포로 및 남북사가 없니"고 주장하고 "있나니 공화국을 신봉하고 자진 의거하여 공화국 공민이 된 사람들뿐이다. 이들 중에서 남조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남북자 교환에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3. 대립만 부추길 국군포로 남북자 맞교환론

이번 남북간의 장기수 송환 공방에서 당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장기수와 국군포로 남북자의 교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9일 국가정보원은 현재 북측에 국군포로 2백31명과 남북자 4백54명이 억류되어 있으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국군포로나 남북자와 교환하는 연계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실현성이 매우 회박한 것이다.

국군포로 같은 '전후처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송환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창호씨 등 국군 포로들은 자의든 타의든 가정을 이루어 북한주민으로 살아왔다. 또한 국군포로 문제는 1954년 2월 1일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

회가 해체되면서 공식적으로 매듭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론할 경우 국제법 논쟁에 휘말릴 개연성도 있다.⁶

6·25전쟁의 교전 당사자 간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남한의 무장 첨보요원의 대북 침투나 북한의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등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이 발효 중인 상태에서 무장 첨보요원을 북한에 파견해 파괴, 민심교란 공작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 또한 강릉 잠수함 사건 등 수많은 휴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남북 어느 쪽도 이런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실 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공 포로들이 남쪽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잔류 국군포로들 가운데 북쪽을 선택하여 북쪽에서 가정을 꾸려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과연 남쪽에서 말하는 대로 이들을 전부 귀환시키는 것이 과연 인도적인 문제인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전쟁 포로 송환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한다면 우리 쪽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김귀옥 박사(동국대 강사)는 "전쟁포로를 일괄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한 제네바협약을 위반하고 휴전협정도 맷기 전에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풀어줘 버린 것은 우리 쪽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⁷

북한은 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남북자 교환에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논리를 따를 경우 이번에도 남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자 문제 역시 남북 쌍방이 관련돼 있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철기 교수는 맞교환 자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건없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석방했으면, 그들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조건없이 돌려 보내는 것이 순리이고 인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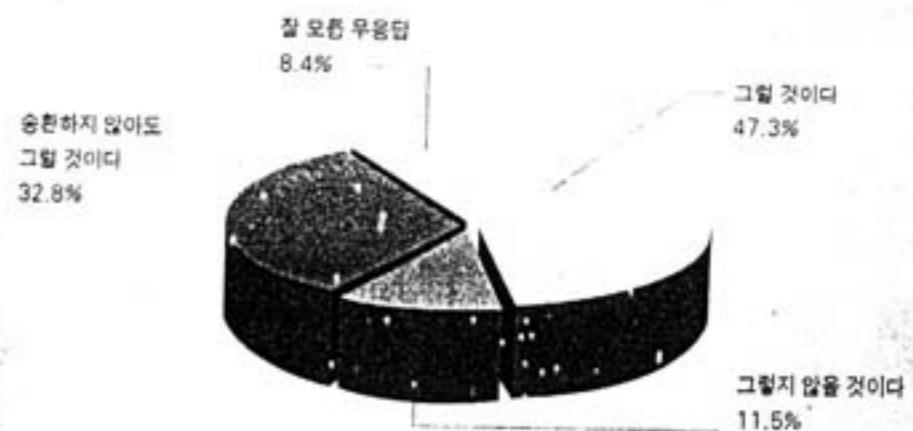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비료지원을 매개로 이르면 오는 6월께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안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 및 국군포로·남북자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물론 대북 비료지원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료'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송환하는 일일 것이다. 조건이 불으면 이미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돼 성공적인 카드가 될 수 없다. 무조건 송환으로 먼저 화해 정신을 보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당국간 대화창구를 통하는 것이 국군포로 문제나 남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4. 정치선전 및 대남 비난 이용에 대한 우려

장기수 송환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언론들은 "이인모식 송환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유는 국민정서와 보수세력의 반발이었다. 즉, 이인모 노인을 조건없이 송환했는데, 북은 감사는 커녕 그를 '살아있는 선전탑'으로 만들어 대남 비난과 선전에 활용하여 오히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면서 이인모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들은 장기수 송환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북한 내 국군포로의 처우문제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여론 때문에 이인모 노인 송환 때와는 달리 장기수 송환에 있어서는 '뭔가 얻었다'는 국민적 만족감



〈그림3〉 비전향 장기수 송환시 우려

을 얻어야 한다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장기수들이 70세 안팎의 고령자들이어서 이들이 사망하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도(47.3%)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할 경우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선전 및 대남 비난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환하지 않아도 정치선전 및 대남 비난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32.8%나 되었다(그림 3 참조).

비전향 장기수들은 '세계 최장'이라는 40여 년의 부옥과 박정희정권의 극한적인 전향 강제 고문에도 자신의 사상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는 연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군중 집회를 열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인권 탄압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일 것이다.

장수련 북한학회 이사는 북한의 요구대로 무조건 송환할 경우 두말할 여지 없이 이인모 노인의 경우처럼 김정일 체제 유지에 마음껏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남한을 파쇼 독재국가로 매도하는데 온갖 선전 선동매체를 총동원할 것이지만 그것은 대내용이지 국제사회에는 억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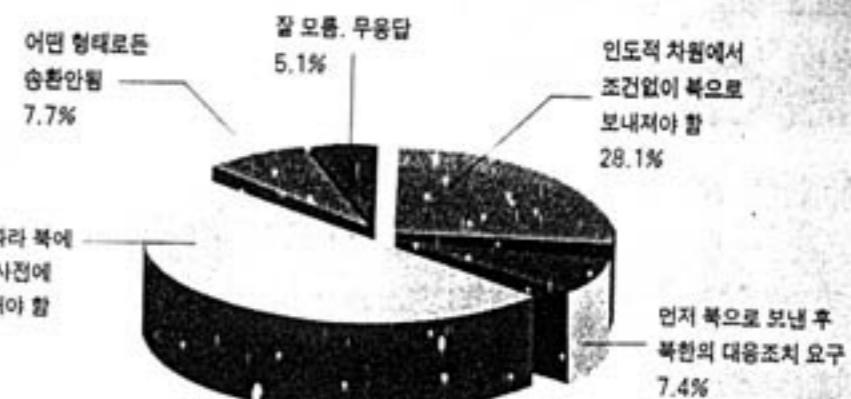
그리고 남한의 경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도리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남북 민간인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국제적 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NPT 탈퇴 문제로 불거진 핵문제에 있어서도 이인모 노인을 송환할 시기에 북한 핵문제가 터져나와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이인모 노인 송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인모 노인이 송환되기 6개월 전인 92년 10월부터 이미 북미 사이에는 핵사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인모 노인 송환으로 인해 두달 후인 5월 25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할 '특사교환'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이후 북측은 이를 다섯 차례나 거듭 제안했고, 그로 인해 그 해 말까지 남북간에 세 차례의 실무접촉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모 노인을 송환할 때와 비교해서 안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잘 풀려갈 시점이다. 금창리 핵문제가 타결되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상황이고, 북에서도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을 하반기에 하자고 제의해 오는 등 남북대화 재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루면 남북내화의 길을 펼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3. 인도적 차원에서의 송환이 남북대화 여는 길

정부가 아직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실한 것은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무조건 송환'에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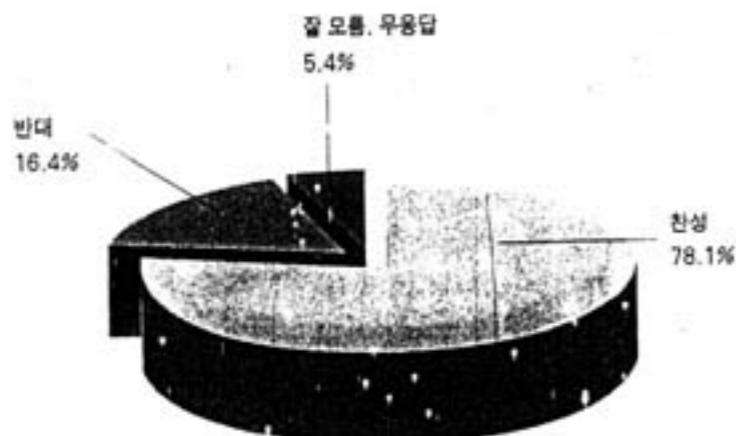
〈그림4〉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방법

다며 "북한의 장기수 송환 요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갈망하는 국군포로나 억류된 민간인들이 많으니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것은 장기수 송환문제가 남북관계를 풀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의 송환에 북측에서도 이산가족상봉으로 성의를 보여달라는 의사로 해석된다. 대북 노용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여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 나타난대로 국민여론은 실제로 비전향 장기수의 처리 방법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북으로부터 송환조건을 사전에 합의받고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51.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28.1%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여론보다도 정부 당국자의 의지와 결단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하면 국



〈그림5〉 정부가 장기수 송환을 결단할 경우 찬반

민도 적극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은 7·4 공동성명 때도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은 민화협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들의 과반수(51.8%)가 상호주의를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장기수를 송환하기로 결단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78.1%였다(그림 5 참조).

장기수 송환을 결단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여론을 사회경제적 변수로 분석해 보면, 의견은 연령별로는 2.30대(20대: 82.0%, 30대: 84.8%, 40대: 78.5%, 50대이상: 67.0%),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중졸이하: 67.6%, 고졸: 79.9%, 전문대졸: 82.6%, 대졸이상: 81.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91.9%), 공무원(87.1%), 학생(84.7%), 지역별로는 충청(84.6%), 호남(84.0%) 지역 충에서 많았다.¹⁰

이같은 반응은 국민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장기수를 송환하기로 결단을 내릴지라도 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사로 보인다.

실제로 다수의 여론은 맞교환을 주장하면 비전향 장기수들은 못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교

환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를 계기로 기대되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¹

그리고 북은 북대로 이 문제를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기수들을 자신이 속한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례로 만들어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상용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장기수 석방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 사회·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정치적 목격을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포함하여 분단으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인권단체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맷음말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장기수 송환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송환하는 것은 반대하는 보수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핵심 논리는 상호주의의 고수, 즉 주는 만큼 받을 수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협상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¹² 그러나 남과 북의 관계는 1991년 남북당국자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드러나 있듯이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 즉, 상호주의를 적용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혹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야 할지라도 그것은

유연하고 탄력있는 상호주의여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 조처는 남북한의 대화 재개에 좋은 촉매구실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 금창리 핵문제로 인한 긴장이 해결될 시점에서 무엇보다 남북한 사이의 신뢰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부의 결단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민감한 문제가 총선의 쟁점이 되는 것을 여당이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바삐, 정부는 분단과 냉전이 낳은 반문명적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서 바로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굳이 남북관계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실천의 측면에서도 그들의 송환문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사무치게 그리운 편지 사연'들과 베이징을 통해 두 가족들이 서로의 육성을 보낸 일 등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남북한의 끊겼던 대화가 재개되면 이후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 등은 또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화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내부의 반발 여론을 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부의 보수 여론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여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 처절한 동족상잔의 총성이 멎은 지 46년이나 됐다. 남북 사이엔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92년 2월 16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합의서 정신에 따라 지금과 같은 대결을 중단하고 민족의 공동 이익과 존엄을 위해 노력한다면 바로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98년 9월 3일, 171개 정당·사회단체로 결성되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5월 24일 현재 206개의 정당·사회단체가 가입해 있다. 민화협은 지난 99년 4월 3~5일 동안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1999. 4. 6. 14쪽.
- 「이전향 장기수 재북 국군포로 맞교환 어떻게 볼 것인가」, 「신통아」, 1999년 4월호, 243쪽.
- 월간『일』, 1999년 4월호, 103쪽.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앞의 글, 14쪽.
- 앞의 글, 「신통아」, 1999년 4월호, 245쪽 참조.
- 김귀숙,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의 해법」, 「통일맞이」, 1999년 4월호, 27~34쪽 참조.
- 앞의 글, 「신통아」, 1999년 4월호, 245쪽 참조.
- 월간『北韓』, 1999년 4월호, 59쪽.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앞의 글, 16쪽.
- 『통일로』, 1999년 4월호, 54쪽 참조.
- 김근식, 「상호대결의 상호주의에서 상호신뢰의 상호주의로」, 「통일맞이」, 1999년 4월호, 16쪽.